

J프로젝트, 새만금 '암초'

# F1·카지노 등 선점권 확보 급선무

지난 21일 방조제가 완공된 새만금지구 활용방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영암·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에 긴장감이 일고 있다. J프로젝트 지역과 불과 150km 떨어져 있고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새만금지구를 대상으로 관광레저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J프로젝트의 기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따라 J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졌다. 우선 새만금 관광레저개발사업과의 철저한 차별화와 현재 추진중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카지노 등 주력사업에 대한 선점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F1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양 지역 사업 추진상황과 J프로젝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등을 살펴본다.

◇J프로젝트 어디까지=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천만여 평에 올해부터 11년동안 35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국제적인 관광레저도시로 만드는 사업, 당초 고 박태영 전 전남지사가 구상해 전남도가 단독으로 추진하다 지난해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오는 2012년 완공목표인 1단계 시범사

## 150km 인접 관광레저 도시... 효과 반감 사업 차별화·특별법 제정 등 서둘러야

업 대상인 1천만평에 F-1 경기장과 테마호텔 등 'F-1존(150만평)'을 비롯해 호텔·카지노·컨벤션센터 등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모델로 한 '베가스 오브 아시아(320만평)'가 조성된다. 또 교육시설과 병원, 주거 및 정주기반시설, 국제간비행학교가 들어서는 '교육타운(220만평)'과 오션마리나와 골프장, 비치클럽을 갖춘 '오션투어리즘 존(250만평)', 영상테마파크와 스튜디오 등 '멀티미디어 타운(60만평)'이 조성된다.

J프로젝트는 현재 대상 면적 3천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전경련 합동기획단이 사업을 맡은 500만평에 대한 개발용역에 들어갔고, 지난 20일 전남개발공사가 삼안컨소시엄에게 의뢰한 나머지 2천 500만평의 용역이 시작됐다. 전남도는 전경련합동기획단과 전남개발공사가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하면 한국관광공사와의 통합 개발계획 작업을 거쳐 올해말 문화관광부에 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돼 2007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정부의 승인을 얻게되면 2007년 말 경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개발=지난 21일 방조제공사 가 마무리되면서 개발계획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만금 내비유용 계획은 6월말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공동 용역결과에 따라 큰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나 전북도는 방조제 축조로 생겨나는 8천560만평의 부지 일부에 오는 2011년까지 J프로젝트와 동일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국제해양관광지(군산)와 동식물 테마파크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등 J프로젝트와 주요 사업내용이 엇비슷하고 주민 고객도 가까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새만금 관광레

저단지 개발사업이 착수될 경우 J프로젝트의 의미는 크게 퇴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새만금 매립지는 당장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농업보다 경제성이 높은 관광레저산업 개발을 선호하면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는 2007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의 작용으로 또다른 관광레저 기업도시 선정 가능성도 상존해 J프로젝트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차별화와 특별법 제정이 우선=J프로젝트와 새만금의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양존하려면 철저한 차별화가 우선이다. 이미 J프로젝트에서 추진되고 있는 F1이나 카지노를 비롯한 주력사업에 대한 선점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상호보완관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J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차(輕車)와 카지노 도입 등을 포함, 추진중인 'F1특별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박혁기기자 unipark@kwangju.co.kr



## 강금실 내우외환

한나라 오세훈 후보 확정 이미지 희석  
당내 경선 경쟁 이계안 의원 공세 강화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사진)이 내우외환에 빠졌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전 의원의 격차가 좁혀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경쟁자인 이계안 후보의 공세는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일단 강 후보측은 오 후보가 맹형규, 홍준표 후보에 비해 상대하기가 수월하다고 주장하면서 역전을 자신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오 후보가 강 후보의 장점으로 꼽히는 '탈(脫) 정치'적인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 후보가 당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각시키려 했던 이미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후보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그는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가 전날 '네거티브' 선거전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후보가 나와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그 선언은 제가 먼저 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발언일 수 있지만 자신과 이미지가 겹치는 오 후보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는 듯 강 후보는 정책대결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물 경쟁력에서는 법무부장관 출신인 자신이 앞서 있다고 판단, 본격적으로 오 후보와의 정책·철학의 차이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어른조사만으로 향후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속단"이라며 "리더십과 능력, 서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정책, 강남북 격차 해소 구상 등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일 수 있고 역전이 가능하다. 5월의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 후보가 오 후보를 따라잡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동안 당내 경쟁자인 이계안 후보는 강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와 만나 "경선에서 당원들은 나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야하고 당 지도부는 나를 전략공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선에서 오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자신이 시장후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강 후보와 좋은 관계를 맺는 상황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강 후보를 잡기 위해 맞춤형 후보를 선택했는데 뻔히 패배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를 내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K 선처를"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양궁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한양궁협회의 명예회장이기도 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제2의 공천비리' 주의보

### 검찰, 군수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초긴장'

민주당에 '2차 공천비리 주의보'가 발령,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 전남지역 모 군수 후보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 군수 후보 및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또다시 공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면 파문은 조재환 사무총장 사건의 태풍 수준을 넘어 지방선거 자체를 휩쓸 쓰나미급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민주당은 전남지역 민주당 군수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내부 논의를 벌인 결과 검찰 수사 결과에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당내에서도 3차 검찰을 벌이고 있으므로 일단은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특히 자체 검찰 결과, 군수 후보가 광역의원 후보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즉각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후보 자격도 즉시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당이 특별당비를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것은 개인 비리인만큼 중앙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효석 선거대책본부장은 "검찰 조사 결과 민주당 군수 후보가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법대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공천헌금 수수가 밝혀진다고 해도 이는 당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개인적인 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앙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원론적인 입장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민주당 군수 후보가 공천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외로 심각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돈이 작용했다는 설이 거짓사실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욱 확실하게 민주당으로부터 떠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 경선 탈락자들이 만들어 내는 각종 공천과 관련된 설들이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주변에서는 검찰에서 공천과 관련, 중앙당 당직자 및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내사하고 있다는 설들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막판에 민주당의 공천 비리가 터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는 "하루하루가 살얼을 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사학법에 발목 민생법안 또 표류

지난해 말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두가지 요구사항을 열린우리당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남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 한나라 최후 통첩 통보

### 우리당 협상 불가 선언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전달했지만, 우리당은 "부당한 협박에는 타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야가 '협상 불가'를 선언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사학법 재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일괄 타결' 원칙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5일 경과규정'을 감안할 때 본회의 하루 전인 5월1일 법사위를 긴급소집하더라도 최소한 이날까지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전제돼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민생법안의 표류는 불가피한 형국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